

AI 시대에 대한 차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조 성 재*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인공지능(AI) 관련 기사와 분석 글, 학술논문들을 보다 보면,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곧 도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빠른 자동화의 보급 속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안전한 직업이라고 여겼던 전문직과 사무관리직의 일자리카지도 AI가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심지어 AGI, 즉 인공일반지능 시대가 도달하면 인류가 절멸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제기되며, 이에 따라 AI 기술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올해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제프리 힌튼 교수는 AI 개발을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AI에 대한 기술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를 그리기보다 실제로 AI 기술이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쟁점이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이번 12월호에는 이러한 취지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세 편의 글을 준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일자리의 양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일자리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것이 기존 예상들이 AI에 대한 두려움을 과장한 것 때문인지, 아니면 아직 AI 기술 적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본 특집의 글들은 현 단계에서 AI와 일자리의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분석적 접근법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논의를 토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AI와 일자리의 문제를 추적해서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자리의 양 이외에 노동과정과 관련하여 AI가 인간의 노동을 보완하고 노동능력을 증강(augmentation)할 수 있다는 논의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기술의 도움을 받아 오히려 일자리의 질과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더욱이 장지연·전병유의 글은 기존의 고속련 일자리들이 이러한 증강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자동화로 인하여 일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9.8%)보다 증강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15.9%)의 비중이 더 높다. 이는 기존의 AI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실체가 없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결과이다. 노세리의 글 역시 AI 기술이 도입된다고 하여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구성하는 과업 중 일부를 기계가 대신하고, 그래서 전체 직무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chosj@kli.re.kr).

보여준다.

이렇듯 AI의 영향은 기존에 너무 과장되었거나,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했거나, 실체에 기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이미 AI는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도 한데, 인사노무관리 영역에서도 일부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채용, 평가(인사고과), 배치, 해고 등을 AI가 결정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이와 관련한 국내외 실태와 논의를 잘 정리하고 있는 양승엽의 글은 인간이 가진 편견을 AI가 확대 재생산하거나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편향성 감사와 영향평가가 필요하고, 당사자들에게 알 권리와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바야흐로 AI 시대에 걸맞은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것이 기존의 법질서 및 공정성 등에 대한 인식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이미 OECD 등에서도 강조해 온 바이기도 하다.

이렇게 AI 시대는 공공연하게, 때로는 은연중에 우리에게 다가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AI 기술과 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AI는 이제까지 보아왔던 기술과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기존 사회경제 질서의 토대 위에서 작동할 것이다. 따라서 AI 기술이 기존 질서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지, 아니면 기존의 모순을 더욱 확대 재생산하게 될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애쓰모글루와 존슨의 저서 『권력과 진보』라는 책은 주목할 만하다. 그들은 기술 낙관론 혹은 기술 결정론을 비판하면서, AI 기술 개발을 통하여 누가 이득을 보는가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지난 1,000년의 역사는 신기술 개발 및 적용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 간의 치열한 다툼의 결과 주로 기득권층의 이해에 복무했음을 보았을 때, AI 역시 빅테크 등 일부에게만 이로운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음을 비판한다. 기술 발전이 자동적으로 진보를 가져다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AI가 획기적 생산성 향상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그저 그런 자동화(so-so automation)’에 그칠 우려가 있으며, 이럴 경우 일자리를 줄이고 소득불평등만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렇게 AI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당분간 사회과학계를 흔들게 될 것이다. 이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AI 기술이 그리는 미래가 어느 시점에 실현될 것인가이다. 어떤 기술은 5년 후, 다른 기술은 20년 후에나 실제 노동 세계에 적용될 것이다. 당분간은 AI를 장착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격이 비싸서, 중소기업이나 개도국으로 아웃소싱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신기술의 프런티어의 변화가 쏙 사회의 변화는 아니다.

현 단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AI가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사관계의 파편화 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다. 이미 우리는 음식배달이나 데이터 라벨링 등에서 플랫폼노동을 술하게 보아 왔으며, 알고리즘이 인간 노동을 지시하고 좌우하는 양상을 익히 알고 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이처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안고 있는 문제인

고용의 불안정성과 낮은 소득을 고착화시키거나, 디지털 테일러리즘에 의해 노동의 분절화와 소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AI 시대는 기존 질서를 벗어나 단절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보다는 경로의존적이고 기존 제도와 상호보완성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고용 및 노동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AI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이제 AI 기술에 대해 좀 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KLI**